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와 과제
발제자 : 이건호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일 시 : 2016년 5월 19일 오후 12시 30분
장 소 :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요약 >

- 우리나라 금융경쟁력 순위를 평가하는 갖가지 기사가 많지만 이런 숫자들로 금융경쟁력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실제로 금융이 잘 돌아가는지, 어떤 부분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은 큰 틀을 계획하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경쟁력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의 시행 △시스템의 선택 △금융기관 제재 방식 등 4가지 요소를 따져야 한다.
- 우리나라는 여러 유형의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마다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 당국이 시장 전체를 업무 영역별로 나눠 금융기관의 업무를 정하고 있다. 다소의 중복은 있지만 역할 분담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은 은행 기대수익은 별로 안 올라가면서 넓은 범위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상황이 됐다. 은행은 정상적인 시장을 떠나 금융업이 감당하기 힘든 투기성이 있는 영역까지 나갔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정책 당국이 시장을 불신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왜곡된 영업형태도 문제이다.
-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을 추진했다. 금융관행 개혁 추진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자율책임, 실물지원, 경쟁제고, 편익확산을 키워드로 내세웠다. 금융회사의 변화를 추구하고,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내세웠지만 문제가 있다. 내용 자체가 애매하며, 정책주도로 하는지 시장에 맡기려는지 의도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현재 금융시장구조의 비판적 평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개혁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 국내 은행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가장 먼저 순이자이익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하락했다.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저항이 있고, 감독 당국이 수수료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돈을 빌려간 기업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체 시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내 은행의 앞날은 어둡기만 하다.

■ 국내 자산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보면 인구절벽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의 자산은 이미 빨간 불이 들어와 있으며 인구절벽으로 인해 주택 매물이 대량 발생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기업자산 역시 인구절벽으로 인해 소비절벽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고령화의 가속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 금융개혁은 로드맵을 구상해 추진해야 한다. 실물경제의 구조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죽어가는 산업은 금융으로 지탱할 수 없다. 구조조정을 제때에 하지 않고 경기회복만을 기대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그리고 금융기업 영업형태도 바로 잡아야 한다. 금융개혁은 큰 그림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어떻게 추진할지를 로드맵으로 그려야 한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개선으로 끊임없이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금융의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큰 그림을 그리자

: 단순 지표로 금융경쟁력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

- 얼마 전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실체가 불분명한 이야기를 들었다. 반면 서울시 금융경쟁력이 세계 11위라는 기사도 봤다. 또 금융 허브 발전가능 도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외부 평가를 떠나 세계은행업계 50위권 안에 드는 국내 금융지주사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가? 이런 숫자로 금융경쟁력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실제로 금융이 잘 돌아가는지, 어떤 것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금융은 큰 틀을 계획하고 그림을 그려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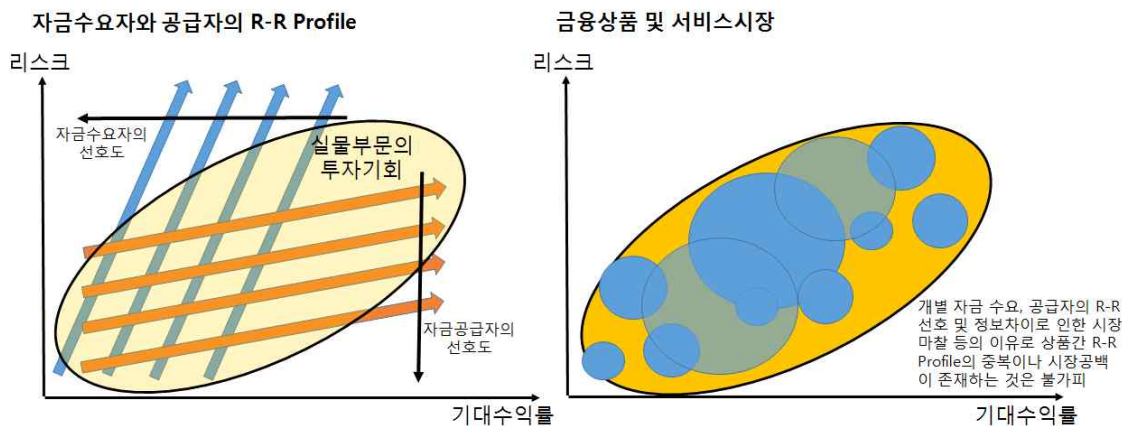
- 금융경쟁력은 4가지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제공이다. 우리나라는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실제로 있어야 할 것들은 대부분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과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하는 주의)이다. 그러나 겸업주의 형태로, 한 면허로 다기능·다품종 유통 채널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품·서비스별 특화된 면허를 만들어 업무영역 간 엄격한 구분을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 셋째, 시스템의 선택이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system, 허용되는 품목만 표시)과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금지하는 품목 외 전 품목 허용) 중 하나를 택한다. 금융은 정적인 상황과ダイナミック한 상황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어떤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사전에 물을 정해놓고 갈 것인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물을 사전에 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재제 방식이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업은 공통된 규제 산업이다. 대부분 나라는 건전성을 목적으로 한 강력한 감독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금융기관 영업형태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소비자 보호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방법은 금융기관의 운영을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나 정책 당국의 정책에 따라 규제를 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방법을 따른다. 정책과 건전성이 최우선이어서 소비자와 공정경쟁은 뒤로 미뤘다. 네 가지 요소를 다시 생각해보고 앞으로 금융의 그림을 그려 나가야 한다.

■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가진 문제

: 정책 당국의 시장 불신, 금융회사의 왜곡된 영업형태가 원인

- 개인적으로 금융 업무를 오래했지만 어떤 금융기관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다 알기 어렵다. 금융기관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회사들도 많다. 한국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며 인프라와 안전망도 선진국 못지않게 갖추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과연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 리스크-리턴 프로파일(Risk-Return Profile, 위험·수익구조)을 보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생각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효용 함수와 비슷한데, 자금 수요자는 위험부담에 비해 수익은 적게 제공하기를 원하고 공급자는 높은 수익에 낮은 위험을 바란다. 이런 니즈에 따라 실물부문이 겹치는 부분에서 거래가 일어난다. 거래를 구체화 시키는 상품이 나오고, 상품들을 어떻게 묶어 취급하는지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시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커버하진 못한다. 금융기관마다 일정 섹터를 맡아 관리하는 것도 어렵다. 결국 시장 안 실물부문에서 투자 기회의 공백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금융시장에서 기본 포인트는 비효율적으로 보일 소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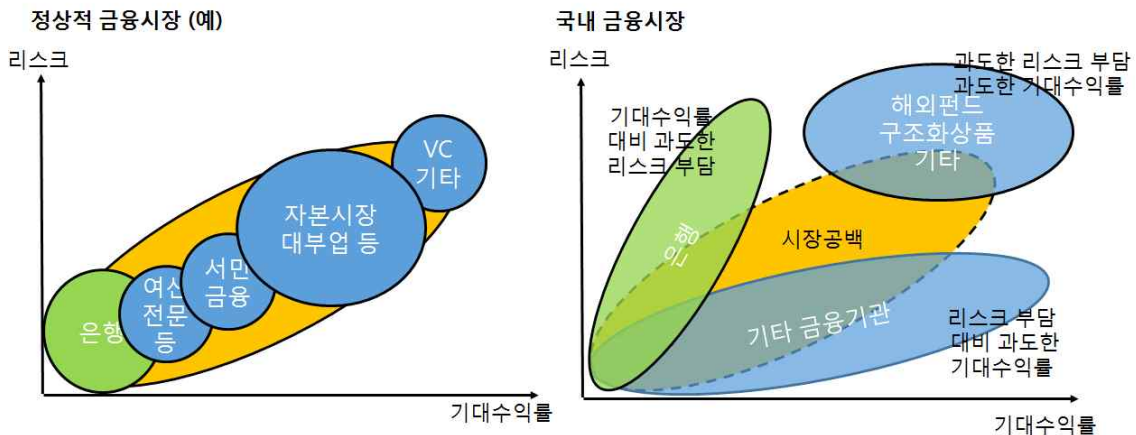
리스크-리턴 프로파일



- 우리나라는 여러 유형의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마다 갖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스크-리턴 프로파일을 보면 정책 당국이 다양한 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시장 전체를 다 커버하지 못해도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짠다. 스펙트럼을 나눠 다소 중복되더라도 역할분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은행 기대수익은 별로 안 올라갔지만 넓은 범위의 리스크를 서비스하는 상황이다. 기대수익에 비해 과도한 리스크를 부담한다. 은행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머지 금융기관은 반대로 움직인다. 시장공백이 발생하고 금융기관이 커버하기 힘든 투기성이 있는 영역까지 발생한다.
- 이렇게 된 원인은 정책 당국이 금융시장 공백을 메우려고 은행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당국은 시장을 불신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최우선으로 했다. 경제시스템 안정을 이유로 개별 기업의 여신(與信,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무) 유지 여부까지 통제하는 상황이다. 정책 당국과 은행의 차이가 불분명해지고 감독 당국은 세부적인 수준의 은행업무까지 통제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감독 당국이 경영을 하는 셈이다.
- 금융회사의 왜곡된 영업형태 역시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왜곡된 영업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피해를 준다.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책 이슈 때문에 은행 포트폴리오가 과다하게 리스크에 노출되어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잠재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은행들이 저금리가 지속되어 수수료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다. 실제로 자산운영 성과가 좋지 않아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자산운용사들 실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든 상품이 불완전 판매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감독 당국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금융 당국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금융기관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를 풀어서 시장기능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규제 한다. 규제강화는 결국 창의성 발휘를 어렵게 하고 영업형태는 투기성으로 변해 시장엔 사기꾼만 넘쳐나게 되는 것이다.

금융시장의 현실: 시장공백과 리스크-리턴 프로파일의 왜곡



■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없는 현 금융개혁의 한계

: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금융개혁은 불가능하다

- 자본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해운조선 관련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여전히 해운 회사채를 사고 있다. 부실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당국이 은행을 통해 회사채를 갚아주고 있다. 은행은 손해를 보고 투기꾼은 이득을 얻는 형태이다. 자본시장에서 감독 당국이 투자은행업을 발전시키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전시키고자 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대형화와 기존 금융투자회사 역량 강화 등 우선순위가 뒤섞여 있다. 정부는 모험투자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설수록 시장기능은 더 작동하지 않는다.

- 이런 상황에서 금융 당국은 금융개혁을 추진했다. 금융개혁 추진 1주년 성과보고에서 금융개혁 4가지 키워드로 자율책임, 실물지원, 경쟁제고, 그리고 편익확산을 제시했다. 금융회사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서민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개혁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있다. 내용이 애매하고, 주체가 정책주도인지 시장에 맡기려는지가 불분명했다. 현재 금융시장구조의 비판적 평가 없이 금융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개혁이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갖추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큰 그림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고, 네거티브 시스템과 상충되는 법체계 하에서 시장의 창의성과 활력을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의 핵심이슈는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을 보호할지 소비자를 보호할지 정하지 않고 개혁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 국내 은행은 이미 위기 상황이다

: 수익성 하락 · 리스크 상승 · 대체시장 미확보가 원인

- 국내 은행들이 위기에 처해있다. 순이자이익이 떨어지면서 가장 먼저 수익성이 하락했다. 지속적인 수익 하락으로 은행은 생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순이자이익은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결국 인건비와 영업망 유지비용을 줄여서 비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은행은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가 않다. 소비자들 저항이 크고, 감독 당국 역시 수수료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 이외에도 은행의 환경 리스크까지 상승했다. 경기회복은 지연되고, 은행이 지원하는 좀비기업(zombie company, 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들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좀비기업들이 쉽게 살아나겠지만 지금은 문제가 심각하다.
- 부동산 담보 대출 역시 문제이다. 과거엔 가계가 자산 성장을 견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계 부채를 견인한다는 말이 좀 더 맞는 듯하다. 이미 가계 부채 위험성은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며,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당국마저 손댈 수 없는 상황이고 은행 자체적으로 줄일 수도 없는 상태이다.
-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체 시장을 찾는 것도 어렵다. 국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은행이라 투자 영역은 영업 밖의 문제이다. 투자은행 업무는 대체시장으로 메리트가 없다. 해외진출 역시 우리나라가 어떤 목적으로 진출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세계적인 몇 개 은행들을 제외하고 타국에서 수익을 내는 은행들은 거의 없다. 은행들은 수익성 하락, 리스크 상승, 대체시장 미확보로 인해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 국내 자산시장 붕괴 시나리오는 시작됐다

: 빨간 불 들어온 가계, 과포화 상태인 기업대출, 줄어드는 국민연금

- 국내 자산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자산시장은 가계, 기업에 투자되어있는 시장으로 분류한다. 가계는 이미 빨간불이 들어왔다. 인구절벽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앞으로 시장에 주택 매물이 나오면서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은행이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주택 매물업에 참여하면서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아직 문제점이 현실화 되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이다.
- 기업대출도 이미 과포화 상태이며 좀비기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은행이 여신을 늘려주면 살아날 좀비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은행의 부담이 늘어간다. 진짜 위험은 인구절벽에 있다. 인구절벽으로 인해 소비절벽이 생기면 시장은 갑자기 붕괴할 수도 있다.
- 국민연금도 문제가 있다. 젊은 층이 앞으로 국민연금을 지탱할 힘이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자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그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내에 자금을 쌓아 놓지 말고, 해외나 여러 곳으로의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 분명한 로드맵 구상으로 금융개혁 추진해야

: 우선순위를 통한 구조조정, 적절한 영업형태 제어 필요

- IMF 당시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쫓겨난 사람만 억울하다는 사회인식이 팽배해, 은행원들도 앞으로 구조조정 할 때 저항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금 상황은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은행은 기업채무를 탕감해야 하고, 부실은행에게는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 구조조정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이다. 이런 산업들은 과거 선진국의 주력 산업이었다가 개발도상국에 넘겨준 산업이다. 전자·자동차 산업은 선진국도 실패와 성공 사례가 동시에 존재한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 산업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선진국 같은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경쟁력 있는 산업이라도 언젠가는 사양화 될 수 있다. 죽어가는 산업은 금융으로 지탱할 수 없다. 산업자체의 회생 혹은 침체 산업이라도 개별 기업 생존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한 금융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구조조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경기회복만을 기대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 해외 감독 관리 사례를 보면 소비자보호는 금융기업 영업형태 규제로 발현된다. 영업형태를 그대로 두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키코 사태, 저축은행 영업정지, 동양증권 사태 등 소비자 보호 이슈 사건은 금융기업의 과도한 마케팅이 원인이다. 금융기관 영업형태를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 현 시점에서 은행 수수료 중액은 불가능하다. 금융위원장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코 믿을 수 없다. 당국은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계산은 서비스 원가로 보고 결정한다. 하지만 은행의 기본적인 서비스 중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다. 수수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감독 당국이 적정 수수료 수준을 규제하는 것은 단순 가격 규제일 뿐이다.

- 은행 입장에서 이윤을 얻을 분야는 주택담보와 상품판매 뿐이다. 그래서 은행은 상품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은행이 자체평가를 할 때 예금 1점, 펀드 3점, 보험 5점을 부여

하면 은행원들은 보험만 팔려 할 것이다. 펀드, 보험은 소비자 지식도 중요하지만 은행원들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은행원들도 세세한 사항까지 잘 알지 못한다. 결국 소비자 보호 부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의 자율적 개선은 힘들 것이다.

- 결국 금융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면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인구절벽이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그리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그나마 선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쌓아둔 자산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는 따라할 수 없다. 금융개혁은 큰 그림을 가지고 미래 어떤 상황을 만들지, 어떻게 갈지를 로드맵으로 그려야 한다. 국내 법체계 내에서 시장을 우선으로,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추진하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 체계 개편 이상의 본질적인 문제도 있기에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큰 그림의 주기적,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 끊임없이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